

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18년2월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
1. 경제에 관한 질문 4

(14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누

적되어 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 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 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경제적 격차이며 격차 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불평등·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니다. 사실 불평등·불공정 구조 타파를 위한 격차 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

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각 정당 대표연설에서도 논란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 인상률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 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 주듯이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 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 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

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갑시다.

작지만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마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 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기 어려운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제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 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 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니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중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쫓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 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 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 진보 모두가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제 정당에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이 없는 약속 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00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고 있는 정의당의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 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기표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며칠 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26번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26 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 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즉 B.C 역사가 되풀이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 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22분)

○의장 정세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탈마저 벗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짐작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제 이러한 사회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총리께서 얘기하는 자유시장경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헌법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는 게 그것뿐입니다.

○이종구 의원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까는 것이다, 지금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배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불법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과열과 투기는 진정시킨다, 셋째는 블록체인 같은 원천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최저임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나라에도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이종구 의원 아니, 사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도와 드린다고나 하는 것도 인건비 보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종구 의원 아니,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좀 올려 드린다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구 의원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어제 오늘 뉴욕 증시하고 코스닥, 코스피 폭락했지요?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구 의원 이렇게 왜 폭락을 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구 의원 아니, 여러 요인들이 분석됐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고 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종구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기름을 붓는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라는 것은 디맨드 풀(demand pull)하고 코스트 푸시(cost push)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앞으로 인플레이가 오를 것이다……

설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도 물가를 늘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동향은 한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요 또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주로 식탁 물가 중심으로 상승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물가가 크게 오르면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서민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입니다. 5월 달쯤 한번 보시지요,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미리 대비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도 지역경제의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구 의원**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되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깐요. 지역별·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정부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8·2 부동산은 8월 2일에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금년 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뿔뿔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는 수요,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8학군이 부활될까 해서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의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사고·특목고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오르든가 전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충정 어린 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이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지금 수도권에서 녹이 나오고 이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건축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50%나 되는 부담금을 내게 하고 또 이분들이 부담금 낸 다음에 나중에 양도한다든지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또 엄청나게 내야 되고.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 까’ 이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깐 이마 또 까’. 이게 전형적인 깐 이마 또 까 범이에요, 깐 이마 또 까 범.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내고 이분들이 상속·증여 할 때는 상속·증여세 또 내요. 이러면 거의 한 푼도 안 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가 있지만 강남 몇 개 지역, 그중에서도 재건축 주택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급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상실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종구 의원**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째이나 위헌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미실현 이익의 과세라는 것이 위헌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 자체로서 위헌이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소득세를 지금 42%까지 내고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기에 10% 붙여 가지고 4.2%, 46.8%에다가 그다음에 재산세, 4대 보험, 이러한 부담금……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가권력이 개인이 번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에요. 국민한테 국가권력이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다른 게 세금입니까? 이렇게 부담금, 4대 보험, 재산세, 종부세, 지금 이게 세금이 보통 세금이 아니에요.

작년에 20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왔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른 수건 짜듯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왜 짜는 겁니까?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짜서 사회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답을 드릴까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에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최고소득세율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부담까지 포함한 그것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꽤 있지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등인데요, 그런 나라들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구 의원** 아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헌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종구 의원** 아니, 그리고 OECD 국가들이 왜 이렇게 세금부담률이 높은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종구 의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보다도 조세부담률이 높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최고소득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아까 말한 몇 나라가 있지요, 일본도 그러하고 프랑스도 그러하고 스웨덴도 그러하고요.

○**이종구 의원** 그것은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부가세율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OECD 국가들은 17%예요. 그러면 그 부가세율만 올리면 조세부담률이 같아져요, 같아져.

○**국무총리 이낙연** 부가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 시민배당’ 이렇게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이라 그러면서 지하철 공짜로 태워 주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이 어때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베네수엘라의 재정을 파탄 낸 차베스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낡은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망가지고 있어요.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경제성장입니다. 그것을 국무총리,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총리님,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민심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권력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총리님,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서 검사를 성추행 했던 안 검사가 신앙간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을 저질렀던 윤창중 전 대변인이 3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총리님,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들께서도 유 의원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희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범국민성폭력대책위원회를 법무

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체제로 부족하다면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오십시오.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두고 화면처럼 ‘뺨 아가리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차이도 뺨 아가리처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재정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총리, 반드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여러 가지 낭비나 비효율 또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매김을 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3개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를 들면 33개 과제 중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전부 조율한다든지 또는 졸업제를 둔다든지 또는 농업직불제 문제라든지 그 밖에 대학 교육 문제 또 산단 지원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요소들 또 중복적인 요소들을 같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유승희 의원** 제가 몇 가지 재정 적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눈먼 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와 협회에서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성은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익원대의 연봉과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각종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입니다.

석유·가스·광물자원 3개 공사만 따져도 임직원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받아 간 성과급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총리, 이런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장이 대충은 차관급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자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에 성과급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성과급 지급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대로 과도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보수 시스템 들여다볼 때 같이 개혁방향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승희 의원**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단계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만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금년 중에 할 예정이고 그때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편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왔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기 때

문에 저희 재정 당국이 갖고 있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정책의 큰 틀은 의원님과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승희 의원** 지금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들이 서민과 빈곤층 그다음에 건설한 중소기업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 그리고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연명하는 소위 좀비기업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실기업을 연명시켜 좀비기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좀비기업이 무려 14.7%입니다. 만성적 좀비기업도 11.2%입니다.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와 같은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2016년도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5%나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본 적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왜 이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신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잠재적인 GDP 손실이 무려 2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유승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앞으로……

○**유승희 의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주신 질의의 취지대로 저희가 죽 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융위라든지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정책금융 효율화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도 개혁해야 될 과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올해 중앙정부의 교육 관련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대략한 15조 가까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중앙정부가 10조 5000억 정도 되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15조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위이지만 지금 한 십수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한 비율이 발생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동안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보육·양육 쪽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교육·의료, 전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이와 같은 문화가 다 같이 종합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중장기 위기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앞으로 정부 임기 내에서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또 그 밖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향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언제쯤 나오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금년 봄에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물링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라는 일단 정부 전체적으로는 2/4분기 내에 큰 대개의 가닥은 잡아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국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대략 70%입니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직불금 규모가 작습니다. 더군다나 종류가 아홉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직불금이 대다수 영세농민들보다는 대농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농업 분야의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직불제 9개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농지를 중심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왜곡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지도 중요하지만 농가, 농업 쪽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개혁의 33개 과제 중에 들어 있고요. 특히 직불제 9개의 단순화라든지 그 밖에 6차 산업 또 스마트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농정에 대한 재정의 지원 방향과 여러 가지 투자 분야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유승희 의원**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은 공공복지 지출액의 상당액을 조세로 환수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유승희 의원**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와 같은 것들

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세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조세감면제도는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저희가 안을 만들거나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세감면으로 혜택을 받아 왔던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조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더욱더 그와 같은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유승희 의원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이윤이 창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등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보편적 복지의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목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세개정특위에서 특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복지재원의 확충뿐만이 아니고 과세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조세형평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지금 있나요? 조세개혁특위뿐만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아까 말씀대로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한 30인 정도의 민간전문가 위주로

해서 곧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 특히 조세와 예산과 여러 가지 거시 문제 또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제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예산 확보를 한 2억 정도 했는데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기본소득안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적인 실험 방안을 연구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이 지난 예결위 때도 애를 많이 써 주셨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몇몇 나라에서 이것의 도입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또 국민투표까지 부쳐서 부결된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틀 내에서 하나로서 조금 더 검토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아울러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서베이 데이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유승희 의원 우리 정부도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세제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가구

별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세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체계가 그렇고요. 다만 그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서 가구별 소득통계를 금년부터 산출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기반은 금년 중에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서는 절감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패한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당에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 전 세계적으로, 하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 같은 국가에서도 이 실험을 하고 있고 비교적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일단은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좀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나름대로 학계에서는 지금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기본소득 문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하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의 복지제도에 이 제도를 하나 더 넣는다고 검토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에서 제가 복지체계 전반에서 하나로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전면적으로 갑자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실험을 해 보고 그것의 적합성이,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제도 속에서 그 틀에서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연구해 주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하나 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성숙한 국회로 국민들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양극화로 뽕뽕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

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또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저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야 하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 1심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외 재산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무거운 죄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죄의 무게에 맞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 아예 죄를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대부분의 사유는 무죄가 되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찾을 수 없다며 그 깃털 같던 1심 판결조차 날려 버렸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판결문을 보고 있자니 애초부터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삼성공화국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가 즉시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이득액 50억 이상일 때 형량을 상향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렇다면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 사항들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채이배 의원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무부장관의 말씀은 그러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그런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킨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처 간에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다시 한번 각 부처의 신중치 못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시고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채이배 의원 혹시 언제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입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적인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둥 3개를 정책의 주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투기와 과열은 진정시킨다, 셋째 블록옵션 같은 원천기술은 육성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착돼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상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신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암호화폐 거래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요, 제일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과열양상 또 큰 폭의 등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걱정이 제일 크고요. 또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라든가 또는 다단계라든가 하는 불법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대로 투기과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취급업자의 내부자 거래나 시가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리셨는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보안검사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 범죄이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중여세 탈세 등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역시 조세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데 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를 마련해서 일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가져올, 그것이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채 의원님께서 모두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자제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책이지요, 보이지 않는 대책이지만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몇 군데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명제 실시와 과세 추진 이것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말씀하신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취급업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당국이 거래소를 보지 않는 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안 된다, 그리고 과세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논의만 되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총리님께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제는 북한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거래소의 망분리부터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시 제도화해야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망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인데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분리 같은 해킹 방지 조치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해킹은 이미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처 방식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딱히 정리된 제도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사고가 난 후이나 대응하는 방식이지 미리 해킹을 방지하는 부분들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킹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해킹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 시점에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은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보수를 받는 분들이 1월 중하순부터 2월 달에 걸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수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신청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3월에 하시든 4월에 하시든 소급을 해서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아직 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 예를 들면 3월 중순에 저희가 고용보험 정산 신고하는 때 같이 하는 그런 수요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일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 예컨대 신불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소급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고용보험 문제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8년 예산 심사 당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라는 부대의견을 국회에서 달아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

다.

○채이배 의원 당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했던 부대의견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지 여부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채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산 할 적에 3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되어서 3당 간에 합의 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EITC라든지 간접지원과의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것이었고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합의 본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7월경에 국회의 해당되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EITC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 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지난 뒤에 바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기 늦지 않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한편 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 저·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가 수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 그 TF 논의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이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유례없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데 유독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이게 주변 지역으로까지 여파를 미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시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집을 사고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연말부터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어서 투기 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실수요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강남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약 68.8%가 더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채이배 의원 시장에서는 이게 투기 때문인지 실수요 때문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그런 지표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더욱더 자세한 정부의 데이터들이 시장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꾸준히 발표하는데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거

기에 적절한 처방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갖지 않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국토부에서 1월 19일 날 재건축 부담금 시물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채이배 의원 그런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개별 단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얼마의 초과이익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산식이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초과이익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 집을 구입한 분들이 나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 드린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것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게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러니까 이미 재건축 분담금을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진작에 정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시장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이런 분담금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

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산식은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12년 전부터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의 분담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진짜 이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채이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암호화폐나 부동산 정책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부처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채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는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호황에 따른 후광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 체감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무분별·무차별·무성의·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 나고 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

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창고로 보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유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를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로 불리며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경제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귀담아들을 내용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성패라고 하

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나 물가상승 또 실질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구매력 향상 또 삶의 질 향상,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 또 거시적으로는 그럼으로써 길게 봐서 우리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의원** 그러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이번에 최저임금 16.4% 올린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게 157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작년에 한 135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의 확충 그런 것들이 우선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궁극적으로 구매력 향상, 내수진작, 성장과 투자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애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 예를 들어 고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숙련돼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현장을 떠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답변을 드릴까요?

○**이장우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특히 과거에

도 10% 이상 임금을 인상했을 적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그와 같은 후유증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들이 부총리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들으면 다 잘돼야 될 텐데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9.9%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최고로,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률이 9.9%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고용이 32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2만 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놓고 보면 고용의 흐름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한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제조업에서는 11만 명 늘어났고 서비스에서는 19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께서는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장우 의원** 그러면 지난 12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몇 명 해고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해고된 숫자는, 지금 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장우 의원** 그러니까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겁니다. 39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전체 일자리는 그렇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장우 의원** 아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임시·일용직이 지난 12월에 39만 명이 해고됐고 2012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12월 달은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의 집행이 12월 달에 덜 되기 때문에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청년실업 문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적인 측면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이 경기적인 측면을 포함한 단기적인 것과……

○이장우 의원 부총리님,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희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지금 와서 변명만 계속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는 몇 년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꾸준히 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지금 국민들께서요 일자리 줄이는 거꾸로 된 정책을 이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정부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영세 중소기업 분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간접지원까지 했고요. 또 혹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가장 해고되기 쉬운 분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면서도 30인이 넘어도 해당되게 했던 경비직

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이장우 의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빌딩 관리·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의점 근로자들, 커피숍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 농어업인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교 조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의원님.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해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저희가 쪽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하시는데 지난 한 달간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 236만 4000명 중에 3.4%밖에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어제 현재로 8.7%입니다.

○이장우 의원 어제까지는 8.7%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8.7%인데 아까 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장우 의원 8.7%가 잘한 수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장우 의원 아니, 지금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10%도 안 되는 이런 신청자를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봉급을 지급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장우 의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대 보험에 반드시 가

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만약 끊기면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직접지원은 1년 하시기로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이장우 의원 그러니까 단기 지원할 때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업주들이 보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정부의 부정수급단속 강화에서 만약에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현장의 30인 미만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 보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총리는 판소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듣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금년에 그친다는 말까지 하지는 않았습시다.

또 아까 다른 의원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할 적에 내년도 지원 금액에 켜까지 씌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반기 중에 집행 실적이나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대통령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경제정책 가지고 취임한 이후에 독대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독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

○이장우 의원 단 둘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단 둘이 제가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장우 의원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이장우 의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차례 뵈

었습니다. 물론……

○이장우 의원 자주 뵈면, 몇 번 뵈었느냐고 말씀을 여쭙어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대통령을 만난 횟수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장우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뵈었을 때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신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편하게……

○이장우 의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든가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장관들께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이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님, 인력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업 경영에서 주로 쓰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 아닐까요?

○이장우 의원 그러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영세사업장에서 만약에 인력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어서 고용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또는 줄이겠다는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인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장우 의원 이것은 고용이 없는 나 홀로 사장 또 직장에 다니면서 자영업 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비자발적으로 투잡을 하는, 또 무인독서실·무인편의점·셀프주유소 등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런 상황 또 시급을 안 올려 줘도 신

고하기 어려운 외국인 알바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통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최저임금대에 있는 분들의 80% 내지 그 이상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분들이시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 노동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2개의 잡을 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80% 이상이 생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께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여러 번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뭐라고들 하시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분들은 제도를 잘 알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주 극히 드물게는 제도를 몰라서 알려드렸더니 신청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예고하지 않고……

○**이장우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제가 거의 예고 없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인상 속도의 신축성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쇼하듯이 사전에 짜놓고 해도 안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저는 사전에 짜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여기 고용부장관 계신데, ‘당장 신청서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셨는지요?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려 달라’, 공직자들보고 그 많은 일들 많은데 ‘다른 일 다 제쳐 두고’ 이게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용부장관이 오늘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만 고용부장관 입장에서 지금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

지로 의욕적으로 좋은 뜻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장우 의원** 건수 올리기에 공무원들 동원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가다듬을 그런 공무원들을, 정책을 가다듬어서 국민들 실생활에 맞게 여건에 맞게 개선해 가는 것이지 공무원들보고 가서 건수나 올리라고 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용부장관하고 제가 늘 소통을 많이 합니다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인플레이션 된다고 제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사실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전체적인 물가는 저희가 금년도 물가 목표인 2% 이내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1월 달 물가를 봤을 적에 전체는 1%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생활물가와 외식물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외식물가가 한 2.8% 올랐는데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1월 달에는 보통 외식물가가 좀 오르는 추세가 있거든요.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외식물가와 생활물가에 있어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급여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식당 음식점 음식값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평균 이상 오른 것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물가 문제는 저희가 전체 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몇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 또 이런 것들 보면서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소상공인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카스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에 맞게 정말 적정하게, 기업을 겁박하듯이 엄포를 놓을 게 아닙니다. 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민간기업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고 겁박하는 것은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질의 주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드신 것 중에는 저희가 불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공정한 잣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업계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최근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왔던 비판적인 얘기들 다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학회, 춘천에서 있었던 것……

○이장우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장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중에 잘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았고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도 또 비판적인 분도 있습니다만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배울 것은 없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적극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 반시장경제

정책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의 모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배하고 개입하겠다는 큰 정부의 역할도 철회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업의 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과 동떨어진 친노동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순리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주선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잘했다고 그러시네요.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이제 평창 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흔드는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최국의 총리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모두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늘 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몹시 긴박한 그런

시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고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평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와 평화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몹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본질의 하겠습니까.

제 원고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를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3.0% 내외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불이 모자라는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 선진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6·25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요. 또 하나는 그렇게 소득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데도 사회복지포함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를 보시지요.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0% 이상 인상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16.6% 또 12.6%해서 상당히 높은 수로 인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30년 동안 열 번이 있었습니다, 10% 이상 인상된 적이. 이전에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게 2000년도하고 2007년도인데 각각 16%와 한 13%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금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에 빠트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2018년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도 윤 의원님과 총리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득 분배 면에서의 왜곡된 측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경제로 못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20년 동안 보면 가계 분위별로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과 가계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또 저희들 분석입니다.

○**윤후덕 의원**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라는 거지요. OECD 수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3.5%가 맞고요. 특히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여성 또 경력 단절 여성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윤후덕 의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그런 분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작, 그것이 성장과 다시 투자 그러면서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고리를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 용돈벌이를 하는 노동자로 중산층의 보조 소득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17·18·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이 용돈벌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가족 생계수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전에 이장우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같은 통계를 인용했는데 지금 80% 이상이 핵심 생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금 인상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계층의 구매력 강화와 삶의 질 또 인적자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임피리컬(empirical)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시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 지원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윤후덕 의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

향을 받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05%p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치를 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는 금년도 성장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전망을 하면서 좀 올려서 저희랑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OECD, IMF도 같은 숫자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마이크로하게 우려 섞인 충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 정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윤후덕 의원 몫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눠서 이웃 사랑을 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가치이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제 현재지요, 어제 현재까지 사업체 기준으로 8만 5000개 그다음에 근로자 기준으로 20만 60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전체 모수로 잡고 있는 숫자의 약 8.7% 정도가 어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증가 추세가 최근 며칠 동안에 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증가 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후덕 의원 다소 개선되고는 있다고 해도 예상치보다는 훨씬 밀돌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상치보다 밀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한 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받은 뒤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1월 달 봉급을 미수령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번 신청을 하면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분기나 3/4분기에 신청을 해도 사실은 1월 1일부터, 1월 달 것부터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윤후덕 의원** 연말까지 신청하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연말까지 신청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실제 저임금 근로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고 싶어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회보험의 부담 수준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부가 약속을 하면 혜택도 길어지고 또 신청률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보험료의 2018년도 수준으로……

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 내지 5년 정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판단 내지 시그널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5인 미만은—그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는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작년 국회 부대의견에, 또 윤 의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로 수고를 해주셨습시다만—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추세를 봐서 7월 중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게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혜택을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을 넓힌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오늘 국무회

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종 그다음에 농업 쪽의 근로자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저희가 대충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최대의 쟁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윤후덕 의원** 그렇지요.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기존의 공약과 방침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신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지금 금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특정 연도에 타격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목표 연도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ですよ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 보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당과도 잘 협의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지요. 3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우대 가맹점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올렸고요 또 수수료 부과 방식만 해도 0.3%p 정도 효과 있는 대책을 냈는데, 금융위 중심으로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해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얼핏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현행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마련한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제 대행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우수 수수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의 3.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속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제도나 법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관행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얼마간의 성과가 있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도급과 가맹·유통·대리점 등 이른바 4대 영

역에서 갑을관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최근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상생협력의 어떤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존재하게 되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특히 가맹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입 강제를 하는 품목을 좀 더 줄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 내용이 아마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문제나 또는 부당하게 특약을 강요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 관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2·3차 협력업체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반도 상반기 중에 지침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기술 탈취 문제 등과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공정경쟁이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저성장이 고착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 혁신성장에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중심에 서야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초대 장관으로서 계획과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으로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하에서 지금 혁신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R&D 지원을 금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고요.

○**윤후덕 의원** 많이 해 드렸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할 생각이구요.

또 모태펀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시장이 좀 더 잘 작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프라 개선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곧이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해서 혁신하는 이런 방안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금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스마트공장은 예산에서, 4000개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받침해 드렸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조금 작아 가지고 기업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또 스마트공장이 된 다음에, 이후에 R&D 지원이라든가 혹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혁신의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공장이 스마트공장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스마트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그 현장에……

○**윤후덕 의원** 내년 예산 좀 더 확보해 봅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스마트공장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의외로 스마트공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스마트공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과감한 규제혁신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허용하고 그리고 사후에 규제하는 체제로 규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신, 의견 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윤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혁신성장이 문제인 정부 성장전략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혁파에 있다고 보고요. 규제혁파가 과거에 늘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든가 샌드박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신고포상제가 있듯이 규제를 공무원이 혁파를 하면 포상제도를 하면 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경남도에서 규제개혁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실 생각은 좀 없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

르면 경기도·부산시·대구시도 규제혁파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규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됐습니까?

○**윤후덕 의원** 예.

국토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 올라가는 데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 원에서 7억 원을 돌파하는 데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후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는 전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6억 이상 또 9억 이상, 특히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풀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후덕 의원** 금년 1월 한 달 동안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2.17%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윤후덕 의원** 이렇게 과다하게 단기간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수요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라고 하는 그런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재건축 시한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아침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월 18일 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건축

물의 구조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부가 말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어떤 특정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몸에 따라 건강상태와 체력이 다르듯이 각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예상치를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후덕 의원** 때도 안 됐는데 왜 이것을 발표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재건축 초과이익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 수치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끓어오를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자 그리고 노령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저항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송의 결과 ‘위헌의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미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을 손대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법을 손대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종석 의원**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5일 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들어 보는 놀라운 경지의 이론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가 더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김종석 의원** 그러면 그동안 내각이나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시장에 맡겼다고 대통령께서는 보십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맡겨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리도록 정부가 유인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더 효과를 내도록 정책을 더 다듬어 봐라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종석 의원** 설마 공권력으로 민간 기업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고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시도, 의도는 아니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강제 할당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김종석 의원** 그렇지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총리께서 ‘규제는 중년 남자 허리 같아서 내버려두면 늘어났다. 비상한 각오로 줄여야 한다’라고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종석 의원**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체위원회는 아직까지 열지 못했고요. 공동위원장님이 곧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규제개선 부서와는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규제개혁…… 물론 실무자는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번에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석 의원** 또 규제개혁위원들과도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님들 가운데 일부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일부와는 면담했지만 전체 간담회는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체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종석 의원** 그래서 저는 총리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까 중년 남자 허리 말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래서 제 허리가 늘었나 봅니다.

○**김종석 의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규제개혁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고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으로 법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규제혁신보고회가 있었고요. 3개월 이내에 평가회의를 또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종석 의원** 역대 모든 정권이 사실은 30여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도 아직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법제적인 접근에서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그 규제대

상 항목을 한도 없이 나열을 한다든가 또 그것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또는 감사제도가 공무원들을 옥죌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규제에 관련된 내부토론을 할 때마다 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실패했는가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나쁜 머리지만 짜매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정부도 과거에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민간이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게 읍소하고 그리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 담당부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읍소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용하니까 규제권자 관점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다시 각 부처 장관에게 해당 규제특례 지정권을 주어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규제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법안을 보면 그 허가권과 결정권은 주무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규제개혁 모델이고, 관 주도의 민간 읍소형 규제개혁 모델입니다. 규제하는 사람들한테 규제개혁을 맡겨서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절반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5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법안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라든가 법으로 그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이런 5가지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인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규제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삼자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규제가 왜 필요하고 적정한지를 독립적인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그 규제가 유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고 그 중심에 총리가 서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좀 더 실효 있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예, 제가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종석 의원**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뿐 아니라 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이념 바탕이 저는 이 규제개혁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불법화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 정책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2%대 후반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3%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잠재성장률을 3% 초반까지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하로 보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겠지요.

○**김종석 의원**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완전고용 상태의 성장률입니다, 그렇지요?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고용되었을 때 물가 불안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런데 지금 3%의 잠재성장률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 성장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석 의원**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종석 의원**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에 맞는 성장을 했다고 해서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성장에 기여하는 구성 요소라든지 또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 경제·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종석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고용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잠재성장률에 접근한 성장률을 하면서도 지금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 봐야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성장이 된다고 해서 그전처럼 고용이 증대가 되면서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 소위 고용 없는 성장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나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김종석 의원**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이 없이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 봐야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너무 단선적인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석 의원**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째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재성장률이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빠르면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경제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어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제가 이와 같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성숙된 경제로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또는 저 기율기를 양의 기율기로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들 또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또 인적 자원의 확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의원**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강제로 인건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한 개 있으면 예를 좀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하여튼…… 모든 정책들이 단기간이든 중장기간이든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하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문

제라든지 또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빠른 효과를 내게 하려고 하는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끄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의원** 현 정부 들어서서, 저도 찾아봤는데,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래도 저희가 성장을 3.1%…… 물론 질 높은 성장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 계셨지만 성장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성장이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신 말씀의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기대효과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시기를 언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우선은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대에서 혜택을받는—저희가 한 300만 정도 근로자를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런 분들과 그 가게 구성원들의 소득 인상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구매력 증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인 영세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보완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구매력과 내수 쪽에서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취약계층의 구매력,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렸고, 저소득층의 일정 부분의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의 내수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니깐요……

○**김종석 의원** 아니,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주로 외식을 한 번 더 가든지 식품 소비라든지 아니면 빗 값은 더 쏜다든지 재래시장에 좀 더 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뭐 그렇게……

○**김종석 의원** 그것은 내수진작 맞는데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지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수진작을 통해서, 단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일자리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같이 늘어나는 식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잘해야 플러스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경제학회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합해 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마침 그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작년 월급 기준으로 135만 원 받는 분이 157만 원으로 월 한 22만 원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한 지 불과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 여러 가지 이런 등등 했을 적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놓고 보시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공정한 경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필요한 보완은 정부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의원** 앞에서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께서 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0%가 가구소득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석 의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다’ 이 2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가구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부가 받으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구매력을 높이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EITC(근로장려세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EITC……

○김종석 의원 예, EITC 예산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예, 1조 7000억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1조 7000억이요.

○김종석 의원 260만 가구에겐 3조 원을 퍼 주겠다는 정부입니다. 260만 가구에겐 지금 1조 7000억을 간신히 쓰고 있어요. 이것을 2배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빈곤가구와 그리고 삶의 질이 그리고 소득재분배가 확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소극적이지 않고요,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노동통계나 경영통계가 보면 조금 엇갈리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3.5%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일종의 해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하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 본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ITC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간접지원 문제, 사회보험료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따져서 한

시적으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낼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의논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이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일관되게 시장 기능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을 선호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에서조차 정부 기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한 실용주의적인 경제노선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공익은 국가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서 관치·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축된 것은 민간 경제활동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입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구호와 선동, 의지와 약속만으로 국민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이념 노선과 인기영합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해주는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성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지난 주말 지역주민과 함께 영화 ‘1987’을 봤습니다. 87년 물고문으로 대학생 박종철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 독재정권과 그 무리들, 2017년 최순실이 뭐길래 최순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정을 농단했던 청와대와 전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겁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묻고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고 국민의 등을 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다가 범망에 걸려들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정리하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국민께 보답하라는 것이 1200만 촛불의 엄중한 명령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경제 공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747 뭐 등등으로 기억합니다.

○서영교 의원 747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서영교 의원 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 7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 11위였던 순위를 세계 15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서영교 의원 박근혜정부의 경제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경제민주화를 몹시 표방하셨던 기억이 가장 큼니다.

○서영교 의원 예, 이명박 정부 747, 박근혜정부 474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역대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 중에 어느 위치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 역대 정부가 계속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서영교 의원 낮아져 온 중에 박근혜정부가 최하위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정부 중에 최고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랜드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서영교 의원 강원랜드에 백으로 입사한 인원만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의 팔구십 %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영교 의원 현 정부를 향해서 우리 청년실업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실업률 최고치를 만들어

놓고 넘겨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나쁜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영교 의원 청년실업률 9.7%에서 정부가 넘어 왔습니다. 9.7% 청년실업률 동안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당시 여당의 실세들이 관여되어서 강원랜드, 청년들을 공기업에 백으로 입사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무마되었다라고 하는 검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해서 강원랜드 등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 어떤 수사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장 여덟 명을 해임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수사 의뢰하고 불법이 뚜렷하게 드러난 직원들을 직무에서 격리시킨 게 100명이 넘지요.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의 이 정도의 주장이 나왔으면 아마 진상을 파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라고 묻지 않도록,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할 거다,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심각하게 넘어왔습니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현황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GDP 대비 팔십이삼 %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보고요, 거의 임계점에 육박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금리, 그리고 좋은 정책이었던 나쁜 정책이었던 그 정책으로 유발된 주택시장의 호조가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 온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노무현 정부 때 가계부채가 얼마나 정권이 마무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670조였습니다. 이제 9년이 지나서, 이명박·박근혜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가 정리될 때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돈으로 1600조 가까이 됐던가요?

○**서영교 의원** 1344조였습니다. 자그마치 6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100조씩 400조가 늘었습니다. 이런 정부,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가계부채를 떠넘겼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국정농단 세력이 넘겨주고 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거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DP의 85%를 보통 임금점이라 말합니다만 더 이상 부풀어나가지 않도록 대출규제 강화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계선상에 놓인 서민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촛불민심이 탄생시킨 정부이고 600조의 가계부채를 떠넘긴 과거 정부를 정리하고 이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께 그리고 국무위원들께 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민의 혈세지요. 이 국민의 혈세가 요즘 대통령 측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모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이 상납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이렇게 특활비가, 그것도 대북 공작 활동비가 이렇게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에게 쓰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기획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특정하게 어떤 정치인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영교 의원** 정치보복일 수가 없지요.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대통령이 그리고 그 측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과기정통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통신비가 가계 부담이 큼니다. 통신비 약정 할 인율을 인하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20%에서 작년도에 5%를 더 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1만 1000원도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가계비 중에서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속 경감해 줘야 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또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통신비가 인하됐는데 2014년 말제가 원가라며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3년간 23조 원 정도 떠넘긴 사실을 감사원 국감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 정도 할인되던 요금에 20%까지 할인됐습니다. 25%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할인시켰으니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얼마 정도 혜택을 받으며 지금 얼마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추가 5% 된게 연으로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자 수가 대체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가입자가 한 630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는 기억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런 선전을 잘하셔야지요. 20% 할인할 때 10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25% 할인하면서 540만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 한 사람당 한 번에 2만 원 정도씩 할인받으면 1년이면 24만 원, 4인 가구면 1년이면 100만 원 정도씩입니다. 엄청난 할인이니 국민들께 이것을 잘 홍보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할인받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작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22만 원씩 참전수당이 들어왔는데 올 1월부터 딱 30만 원 들어오네. 주변에 있는 우리 참전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훈정책의 개선을 내걸었고요, 또 작년 말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일부 수당이 올라갔습니다.

○서영교 의원 보훈 어른들이 참전수당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른들이 아주 고마워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20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영교 의원 20에서 25만 원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 그렇습니까?

예.

○서영교 의원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게 됐지요.

○서영교 의원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원래는 모든 아동들,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90%, 좀 축소됐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러면 유치원 보내거나 어린이 집 보낼 때는 비용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됐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영교 의원 누리과정 내용은 전부 다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서영교 의원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서영교 의원 제가 국방위인데요, 병사 월급도 왕창 올랐어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병장들이 40만 원까지 갔지요.

○서영교 의원 21개월 근무하면서 병사가 매달 2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이 병사들이 제대할 때쯤 400만 원가량의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퍼 주기를 하면 국민 세금 더 걷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에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건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어른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25만 원 받으면 내 아들딸 세금 더 걷는 거 아니야?’.

오늘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민들에게 세금 더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세금 부담이 없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내신 혈세를 제대로 알뜰살뜰 챙겨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더 크게 넓게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일본·미국 등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다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겁니다.

○서영교 의원 독일은 10.5달러, 미국은 7.25달러, 일본은 7.5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데 독일·미국·일본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나라 경제가,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에 일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

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서 구매력이 늘고 취업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카이’라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독일은 90만 개의 일자리가 줄거라고 했는데 전혀 줄지 않았고 실업률은 최저고 고용은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17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어서 알겠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또 특히 임대료 인상의 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간접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단기적인 고통을 빨리 극복하고 연착륙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주어지는 나라, 저희가 꿈꿔 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 그러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걱정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언론에 ‘약발이 먹혔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새롭게 확인한 것은, 무주택자들의 청약하는 내용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무주택자들이 분양에서 당첨되는 비율이 전에 비해서 27% 정도 늘어서 정책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에게 효과가 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 ‘대출 증가 속도도 훨씬 둔화됐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가계부채 증가율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소관 하는 건 아닌데요. 두 자리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다가 지난 3/4분기에는 9.5%, 한 자리 수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약발 먹혔나’ 다음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에 산동네가 있습니다. 산동네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소방도로도 만들고 도시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사진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도심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쇠퇴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1%가 아닌 99%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주는 정부,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망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 평화의 한반도, 국민이 잘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채용비리 문제, 암호통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 정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종의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청년들께 깊은 좌절감을 드린 참 안 좋은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채용비리는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河泰慶 의원** 채용비리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채용계획을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추천배수를 변경했고, 강원대병원도 채용공고 후에 채용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합격배수를 바꿔서 특정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 발표에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일자리 좀도둑이고 일자리 큰도둑이 따로 있다, 정부가 일자리 큰도둑질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말씀이신지요?

○**河泰慶 의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채용비리의 전형적인 방법이 채용계획을 바꾸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큰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3개월을 앞두고, 9급 공무원시험 3개월을 앞두고 시험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획 변경 내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5% 가산점을 준 겁니다. 이 가산점은 5%가 22점인데요. 수험생한테 물어보니까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전에 이걸 변경·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니까 사법고시는 3년 전에 범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요. 수능도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6개월 전에 시험 관련한 계획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찾아와서 지금 시험 준비해도 시험 결과가, 3개월 전에 발표됐으니까 4월 7일이 시험입니다. 5월 20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니, 최소한 계획을 바꾸더라도 1년 전에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보고받은 기억에 따르면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에 없었고요. 직업상담직을 고용하게 돼 있었던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까지는 일반직으로 뽑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직렬을 신규채용

하게 된 것이지요.

단지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가산점이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22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사기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3개월 전에 이걸 발표해서 다른 학생들은 아예 자격증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부분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업상담직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 아니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안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뽑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河泰慶 의원** 총리님, 이것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총리님, 지난번에 단일팀, 청년들은 단일팀 진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실언하셔서 사과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河泰慶 의원** 이것도 3개월 전에 바꾼 거예요. 총리님 이것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를……

○**河泰慶 의원** 그러니까 1년 전이라도 바꾸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한 겁니까? 이것 잘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표된 것을 다시 취소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혼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드렸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3개월 이 짧은 기간에 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게 되고 다른 청년들한테 기회를 박탈한 이 부분은 왜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과정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감사하겠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나오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점에 대해서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구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이 학생들도 이번 단일팀에서 피해를 받은 똑같은 젊은이들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런 청년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연기까지도 한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河泰慶 의원 저는 이것 노동부장관 문책 사유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촛불정신이 됩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 때문에 사드도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왜 이 정부는 자기 정부의 정신을 훼손해 놓고서도…… 지금 총리님께서 진솔하게 반성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 실망이고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암호통화 관련된 건데요.

2018년 1월 15일 회사 주식 그래프입니다. 9시부터 올라가서 9시 삼사십 분경에 고점을 찍는 우리기술투자, SCI평가정보, 옴니텔, 비덴트, 에이티넘인베스트, 넥스지, 대성창투, 모다, 버추얼텍, 한빛소프트, 10개 회사입니다. 이 10개 회사가 9시부터 9시 삼사십 분까지 평균주가 30% 폭등을 했습니다. 이 10개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河泰慶 의원 암호통화 관련 회사 주식들입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 이번 암호통화 정책 중에 정부의 선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이 투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중독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너무 아마추어다, 이 아마추어 정책 때

문에 하루는 폭락했다가 하루는 폭등했다가,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정부가 이러한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심화시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총리실에서 나왔습니다.

1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총리실에서 암호통화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지 시간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보를 먼저 입수한 회사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폭등을 한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암호통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8시 30분에 문자로 바깥에 공지했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9시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체 공무원들과 기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다음 9시 40분에 엠바고 해제했습니다. 문자공지 8시 30분부터 엠바고 해제하기까지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암호통화 관련 회사 주가는 30% 폭등하고, 그리고 엠바고 보도자료 풀려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출렁거리는데 안 됐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빨대 꽂고 있다가 재각 입수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리실에 지적했습니다. ‘사과해라. 왜 이렇게 작전세력들한테 이용당하느냐, 오히려 방조하느냐’

증거를 보여 주시지요.

저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9시 40분까지 엠바고 걸린 전문이 9시 20분경에 유출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9시 23분에도 요약본이 유출됐습니다. 요약본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전문을 다 보고 요약했기 때문에 훨씬 전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실망한 건 총리실 발표입니다. 총리실 발표는 9시 40분 엠바고 45초 전에 유출된, 그건 기자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것 하나만 인정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한 9시 20분경에 유출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책임이지 총리실 책임은 없다. 사과하는 못 하겠다’, 이 부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하 의원님께서 이미 수사의뢰를 해 놓은 사안이니까요,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내부조사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그렇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대상끼리 파악했다고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河泰慶 의원 주가나 시세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엠바고를 이렇게 40분, 그리고 발표 공지까지 1시간 10분 걸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엠바고는 기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후에 보고받았습시다마는 이것은 엠바고 사안이 아닙니다. 엠바고 후로 릴리스한 것은 잘못됐고요. 또 간부들에게 수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보도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도 적합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작전세력……

○河泰慶 의원 정부가 이번에 얼마나 책임을 방기하느냐 하면,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13일 날 관세청 직원으로 정부대책 자료가 유출된 게 정부 발표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깥으로, 민간으로 유출되기 전에 공무원 사회에 한 바퀴 확 돌았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 조사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핵심은 여기에서 정보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저 왼쪽 편이고 오른쪽은 몰라야 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지돼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 결과 이번에 하나 더 나온 게 금감원 직원이 700만~800만 원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밝혀졌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지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자백한 거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들었지요.

○河泰慶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그 사람을 조사한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1월 15일 이 과정에 외부

로 유출되기 전까지 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에서 퍼지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하태경 의원님께서 수사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돌팔이 정책으로 둔갑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의원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모르시면서 고집은 되게 세십니다. 그러니 경제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국가경쟁력 높이고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더 만들고 국민 부자 만들려는데 우리는 과거 싸움, 이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앞 정권을 비판하고 잡아들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경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우리 경제는 그리스 짝이 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총괄 조정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있지요.

○정유섭 의원 그렇지요? 정부조직법상에 기재

부장관이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그 이상주의적 정책을, 운동권적인 이상주의적 정책이 청와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경제부총리는 그냥 허수아비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가 늘 놀라는 것은 뵈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 분같이 보이는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그러면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고맙습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경제정책조정회의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경제장관회의가 있고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있고요……

○정유섭 의원 아니, 경제현안점검회의하는데 왜 이렇게 정책 혼선이 많이 납니까? 뭐 가상화폐 대책도 그렇고,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도 그렇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쳐진 데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 같은 것 기간 늘리는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그 내구연한 문제라든지 안전성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쳐지고 좀 그런 과정에서의 잘못된 전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진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문재인 경제 정책 중에서 부총리님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 있어요? 하나만 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 얘기를 했었고요, 혁신성장 발표된 것도 지금 열댓 건 이상 발표를 했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장관

들이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충분한 토의와 또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경제장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자, 김 부총리님 30년 전문 경제관료 했어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이게 전문 경제관료가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것 다 이상주의적인 좌파, 좌파 운동권적 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가 뭐니까?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유섭 의원 그렇겠지요.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 걸어 놓고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과제겠지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아까 김종석 의원이 총리님께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장차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그것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 의원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하신 전체 맥락 중에서 그것만 딱 따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같은 회의에서도 또 인근 회의에서도 일자리가 민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유섭 의원 아니, 말씀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기업이 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민간이 아이디어 투자해서 혁신해서 일자리 만들지 정부가 하는 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정부는 투자할 뿐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을 정 의원님과 똑같이 했고, 다만 그때 맥락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코붐 세대의 청년들이 작년부터 5년 동안 한 39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청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자는 뜻으로 하신 말

쏟아지……

○정유섭 의원 그러면 청년실업이 지금 9.9%예요. 체감실업률은 27%인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7%까지는 안 되고요.

○정유섭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일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미스매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로 봐서는 청년실업이 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경활인구로 나오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또 고용되는 숫자도 같이 늘고 있는 그런 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정유섭 의원 일자리는 있지요. 외국인들도 다 들어오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부가.

좋은 일자리,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기업들이 투자해야지요. 외국 투자가 들어와야지요.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지요. 그래야 일자리가 되지 이렇게 다 막아 놓고 기업들은 다 죽일 놈 만들어 놓고 누가 투자합니까? 청년들 좋은 일자리 안 생겨요. 다 그렇게 알바나 하려고 그러고 최저임금이나 받는 그런 일자리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문이나 기업 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큰 정책목표의 하나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이고요.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험펀드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정유섭 의원 기업이 일자리의 주체입니다.

보세요. 지금 거제나 통영 같은 데 보세요. 미국의 러스트 벨트 보세요. 기업이 죽으면 투자도 소비도 없습니다.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정유섭 의원 그러면 기업이, 왜 현대자동차가 21년째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습니까? 그리고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는 100억 불인데 홍콩은 1000억 불이고 싱가포르는 600억 불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투자 여건이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특정 기업 얘기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갔던 기업 중에는 금년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두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곳도 있었고요. 또 고용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용계획을 밝힌 곳도 있어서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주체를 같이 좀 봐 주신다면……

○정유섭 의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98%이고 미국은 일자리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옛날에는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는 팔 영혼도 없대요. 팔 영혼도 없는 이 친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크롱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7년도 올해의 나라로 프랑스를 지적했습니다. 왜? 프랑스가 환골탈태했어요. 독일 하르츠 개혁을 모방해서 노동개혁 했지요, 규제개혁 했지요,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베르사유에서 마크롱이 뭐라고 했어요? ‘Choose France’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 가지고 그날 4조 7000억인가 투자 약속 받았어요, 구글·페이스북·도요타한테.

그런데 1월 22일 우리는 뭐가 있었느냐? 타임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났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참 고맙다고 했어요. 참 낭만적이지요. 낭만적인데……

김동연 부총리!

프랑스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무슨 말씀의 취지인지 알겠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혁신성장의 큰 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정책적인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글로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아니, 아베도 2013년 12월에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오라 그러고, 미국의 트럼프, ‘미국에 투자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에 투자해’……

지금 하는 정책은 기업들보고 다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보세요. 탈원전 해서 전기세 올리지요, 최저임금 올리지요, 각종 규제 다 있지요, 강성 노조 있지요, 법인세 올리지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런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의원님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진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충분히 같이 동감을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고쳐야 될 점도 있고요. 대기업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규제개혁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유섭 의원 그래요. 제가 부총리님한테 조르

는 건 아니고 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번에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다는 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들지 말고 반성이나 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적폐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아무리 국민 지지가 높다 그래도 이렇게 간땀이가 부어서 국민들한테 합니까?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산자부장관님은 경방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다 하니까 ‘자제하라’, 아니, 자제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자제합니까? 여건이 안 좋으면 나가요. 손흥민보고 잉글리시프리미어에서 뛰지 말고 K리그 와서 뛰라 그러면 땀니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뛰지. 안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특정 기업의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겠다는 게 꼭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여쭙보시고 총리께서도 경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영업 활동에 대한 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할 것 없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과 혁신성장의 축으로서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데 좀 힘을 보태 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 지난주에 중국 갔다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 거기 중관춘 갔다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 중국의 실리콘밸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정유섭 의원 거기 갔었을 때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총 회장이랑 상공회의소 회장이랑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투자환경은 중국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분 회장이 무슨 맥락으로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

만 그렇게 일의적으로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의원 그러면 중관춘 가서서 보신 느낌은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중관춘을 갔더니, 저는 거기에 예고 없이 가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대한 시사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청년실업 문제 하시는 데 구조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의 동질성 문제거든요. 아까 미스매치가 중소기업에서 20만 개 나오는데 동질한 교육 받은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의 뭐라고 할까요, 통일성 때문에 생기는 미스매치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1년에 한 800만 명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300만 이상이 창업을 꿈꾼다고 해서 그 교육 제도라든지 창업으로 가는 동기가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정유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중국처럼 그렇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혁신성장위원회에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고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모험자본을 대주고 또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 해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정유섭 의원 부총리님하고 저하고 이게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보상 체계의 잘못된 것을 저는 꼽습니다.

○정유섭 의원 보상 체계요? 보상 체계라고 그러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 무슨 보상 체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를 들면 학생들은 전부 일류대학 가야 되고 또 좋은 데,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보상 체계로 짜인 기득권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 나름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유섭 의원 지금 기득권 얘기 잘하셨어요. 기득권 제일 누리는 데가 어디냐면 강성 귀족노조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 투자 다 막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 이 사람들 때문에 창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많습니다. 왜 자영업자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왜 자영업합니까, 거기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이것을 만들려면 노동계 기득권층 이것 깨야 돼요. 이것 민주당 정부가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노동개혁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IMF, OECD 연례 보고서에서 뭐라고 권고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규제개혁해야 되고 국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좋은 일자리 절대 안 생기고 해외 투자 안 들어오고 국내 대기업 투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개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된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 문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안정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의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뒤에는 유연성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과 같은 빅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의원 당연히 사회적 안전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유럽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119개국 중에 116위래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올리는 수준이나 실업급여 기간을 늘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제도로써 그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하기에는 안정성 문제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먼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직 훈련,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결국은 유연성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개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정유섭 의원 노동개혁 어려워요. 수술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요법으로 아까징끼 바르는 것 하지 마시고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면 경제 다시 살 수 있고 일자리 생깁니다. 젊은 애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정유섭 의원 산업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전력수요가 8762kW였어요. 그런데 산자부의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가 8520kW였어요. 어저께 200kW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전력수요 감축 지시를 기업한테 내렸어요. 그게 이번 겨울에 벌써 여덟 번째예요. 이것 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대체적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겨울의 기상 같은 경우에는 81년 이후에 최혹한기를, 그러니까 -15도 날짜를 5일이나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파의 영향으로써 이렇게 됐고……

○정유섭 의원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정유섭 의원 국가는 전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고의 피크타임 때 맞춰 가지고 전력 설비를 구성한다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공급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정유섭 의원 아니, 탈원전한다고 원전 11기나 세워 놓고 이러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의원님,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탈원전하기 위해서 11기를 스톱한 게 아니라 원전 공사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원전 내부에서의, 리액터에서의 철판 녹슬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11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올(overall)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섭 의원 8차 전력수급계획 수정하세요.

원전 수출하러 외국에 가서 무어사이드 원전 계약하고 오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사인했습니다.

○정유섭 의원 했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너네는 왜 원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왜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정유섭 의원 당연히 없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묻는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대체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것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질의는 없었고 걱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유섭 의원 아니, 위험해서 안 짓는다는 얘기 안 해요, 본인들이? 장관님, 그것 안 하셨어요? 국내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안 하시는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저희들이 워낙 밀집 지역이고 국토가 작고 그리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는 정부 간섭을 늘리고 우파는 시장 자유를 존중합니다.

지금은 좌파 시대입니다. 그래도 관치경제가 너무 심합니다.

현 정권 정책은 쉽습니다. 나랏돈, 국민 세금으로 막 메우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나랏돈 우습게 아는 나라 다 망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을 펴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몰려오는 나라가 아니라 돈과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 정책과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농정의 적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8년부터 식용 GMO(유전자 변형 작물)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GMO 수입 1·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그런데 시장 어디에도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료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GMO 완전표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말씀하고요. 완전표시제로 갔을 경우에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에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니까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료에 GMO 표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현권 의원 2007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 고시로 가축 사료에 GMO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식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우습게 됐군요.

○김현권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Non-GMO 표시라고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던가요?

○김현권 의원 그러니까 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GMO를 쓰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수입 맥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맥주를 들어 보이며)

이 맥주에 보면 여기 옆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 뒀어요. 이걸 왜 붙여 뒀을까 궁금해서 뜯어 봤습니다. 뜯어 봤더니 옆에 Non-GMO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GMO 원료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입해 가지고 가려 갖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김현권 의원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허

물어졌습니다.

기업과 법인의 농지 소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42% 가까이 됐던가요?

○김현권 의원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사한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현재 농지의 60%가 임대차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농지의 85%가 비농업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현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는 51%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농업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만약 상속에 대한 농지 소유를 지금처럼 허용한다면 향후 20년이 지나고 나면 농지의 80% 이상이 비농업인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닌 게 아니라 상속과 이농, 농업을 떠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또 농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대책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걸 풀었고 또 어떤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죽 풀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형해화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와 이농인의 농지 소유는 이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농업의 생산적 가치는 약 50조인 데 비해 공익적 가치는 162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10명 중 7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공감했습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헌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만약에 대

통령이 발의하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지금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축사 적법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현권 의원 저는 이 축사 적법화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라떼 이것이 축산농가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강의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을 시범사업을 했고 구체적으로 검토·준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노무현 정부 때 시범사업 했고 그다음 정부에서 본격 실시됐습니다.

○김현권 의원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한 축산직불제는 오염총량제와 연관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역대 정부의 한우농가 사육두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 넘겨 주십시오.

지금 축사 적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큼니다. 왜냐하면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기간 5년 동안은 축산농가 수가 변화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정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20만 호에 달하던 한우농가가 지금 10만 호 미만, 8만 호로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되면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농촌경제가 피폐화됩니다. 결국 축산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축산이 규모화되고 상대적으로 과밀화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경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 문제가 농가가 폐업으로 가 가지고 저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몇 가

지 고려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유예기간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농가는 그 유예기간 내에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 주신 농가가 계시고요.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있을 거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예기간을 더 드렸을 경우에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칼로 무 베듯이 끊어 버리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농가의 축소 또 전반적인 축산업까지는 모르고 축산인들의 빈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축산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축산농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법이 개정된 것은 2014년도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3월 24일이고, 1년 뒤에 시행령이 발표됐고요.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종합적인 세부지침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2017년도 하반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가 내가 적법화 대상이 되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2017년도 하반기에서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간을 법적으로 좀 더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은 자그마치 26개입니다. 몇 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진척이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축사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총리실 산하로 와서요 제가 약속을 드려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말씀 주신 충정이나 현장의 어려움 같은 것을 결코 경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곧 내놓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축산농가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수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발언 시간을 뺐는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김 의원님께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 예결위에서 AI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AI가 자주 발생하는 농장은 적정한 보상을 하고 휴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AI가 줄어들게 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휴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1년 전 겨울에 비해서 AI 발생이 거의 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것은 저희가 꼭 감사를 드려야 되겠길래 제 답변이 끝난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권 의원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앞으로 많은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 예.

축산업도 유지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수질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국의 자원화 시설과 공공처리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단위의 퇴비를 야적해 놓은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퇴비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농가에 지금 확보해 있는 퇴비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충분히 축산농가도 살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김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나오

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남만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일터도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이나 그 파급효과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이나 이념적 허상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약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금방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빠른 약들은 대부분 독성이나 마약 성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증상만 완화시킬 뿐입니다. 결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시적 증상만 완화하는 대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인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픈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막달효과’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막달효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의원**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경제행위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부가 지금 신DTI, 양도세 가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등 이런 것 전부 쏟아 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시행 전에 경제행위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의원님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게 이런 막달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렇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얘기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장관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아 의원** 아니요, 제가 원인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막달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염두에 두셨느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아 의원** 잘 모르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영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두더지잡기 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없습니다.

○**김현아 의원**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게임 같은 것 잘 안 합니다.

○**김현아 의원** 예.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요.

저 화면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저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보입니다.

○**김현아 의원** 꼭 장관님이 집값 잡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아 의원** 장관님, 강남 집값 잡는 것 이제 포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거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계속 보도자료에서 강남의 투기세력과 집값을 잡겠다고 연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일 얘기를 하지 않아서요.

○**김현아 의원** 말로 쏟아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연일 제가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 그런 이야기들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까 상임위장에서 40년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집값 오르는 게 앞에 여러 분들이…… 장관님께서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투기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공급 문제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급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예를 들어서 말씀……

○**김현아 의원**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금융위기 이전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과 인근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보여 주는 변화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3구는 위기 이후 하락폭도 적었고 이전의 고점 회복은 물론 최저점 대비 6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아직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강남은 공급이 적고 1기 신도시에는 공급이 많아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

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의 가구 수 대비해서 2011년부터 19년 예정 물량까지 봤을 때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일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저희도 그런 자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시면 회복 못 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기 신도시가 강남 3구의 2배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2019년에 강남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20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의원** 강남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만 보고 이 상관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강남도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입주 물량과 가격 변동을 보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입주 예정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물론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물량이 평년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04%가 많았고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3%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물량만 보더라도 강남 4구는 평년에 비해서 1.62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진 통계로 봤을 때는 강남 물량이 적거나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증감률에는 함정이 있지요. 2006년이 적었으면 2007년이 조금만 전보다 많아도 증감률 자체는 높게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장관님은 재건축을 억제하시지 않아서 2009년 이후에도, 강남의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재건축을 억제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의 목적은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쏠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대로 투기수요라고 백번 양보해서 인정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투기수요가 그냥 생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모이겠지요.

○**김현아 의원** 그렇지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야지만 투기수요가 몰립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그런데 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시물레이션 결과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액이 최고 8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최고일 경우에, 산출 근거는 의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건데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김현아 의원** 아니요, 장관님. 제 얘기는요 산식이 아니라 산출 근거를 여쭙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출 근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대입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현아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중간 중간에 가격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산출 근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출의 기준을 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시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이 개시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현아 의원** 그것 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 시점을 몇 년으로 보셨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을 잡았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니까 그게 평균 몇 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겠지요.

○**김현아 의원** 그러면 2015년 정도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그다음에 완공은 언제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완공은 지금부터 한 5~6년 정도로 잡아야 되겠지요.

○**김현아 의원**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율이 최고 50%니까 지금 최고액으로 16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5년 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신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다시 얘기할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의 추진위 승인 시점은 지금보다 한 5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정도의 시점에 있어서 강남의 아파트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계산이 나오지요.

○**김현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동안 값이 안 오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올랐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부터 앞으로 5년 이후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5년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김현아 의원** 그러니까 오른 거라고 보신 거지요. 지금 5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랐지요.

○**김현아 의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분이 다 있기 때문에 하락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후의 5년은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오른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산입식을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격

이 오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수요 막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가격 오르고, 좋다는 얘기네요?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수요를 막아서 좋다고요?

○김현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급이 왜 줄니까?

○김현아 의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셔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오던 것이고 지금 5년 동안 유예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제도는 아니지요.

○김현아 의원 그러면 일단 장관님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한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걸 전제로 추산을 하셨다고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굉장히 애매하지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 김 의원님이 부동산 쪽을 얘기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의 이익과 가치 변화를 보는 것 같고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변동성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남 재건축 평균 10년 정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발표를 즉 추산해 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투기이고 빌딩이나 상가나 주식, 채권으로 돈을 버는 건 투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파트, 상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거기에 투자를 투기하는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행위에 대한

그걸 분석해서 케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아 의원 저는 한 채는 무조건 실수요이고 두 채는 다 투기꾼이다 또 상가나 빌딩에서 돈 버는 건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 고가 아파트 가진 걸 갖고 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부총리, 강남의 집값 잡는다는 정부정책, 사실상은 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국토부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영향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에 천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 때문에 8학군 부활시켜서 강남 집값 올렸다고 하는 기사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일부 봤습니다.

○김현아 의원 사전에 그 정책 발표하실 때 이 정책이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저희가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값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딱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현아 의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만이라도 부동산 대책 발표하실 때 다른 정책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거시적으로 조율하시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부처와 함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문제라든지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강남 3구 아파트가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강남구가 한 12만몇 개니까 합하면 6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 3구만 합쳐서는 한 30만 정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4구가 아니고요?

○**김현아 의원** 강남 3개 구만 30만 세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도대체 몇 % 정도를 투기꾼으로 봐야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강남의 몇 %가 투기꾼이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현아 의원** 아니, 제가 몇 %라고, 얼마를 봐야 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실수요가 아닌데 투기 목적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초과이익을 목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투기 수요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니까 일부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무주택 신혼부부를 한 50만 가구 이 정도로 보고 청년은 한 127만, 128만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 164만 가구라고 합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이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14만 가구고 90%가 넘는 150만 가구가 아무런 보살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강남 3구의 10%만 투기 세력이라고 봐도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3만 명 잡겠다고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동안 정작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150만 가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발표해서 그 정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8·2 대책 이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를 변경해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만 27% 정도의 무주택자가 더 많은 분양에서 당첨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분양은 좀 다른 거고 사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 얘기가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임대주택 얘기도 있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처럼 분양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부가 공급한다는 임대주택은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지요.

○**김현아 의원** 그것도 누가 언제 어디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건 아니고요.

○**김현아 의원** 아니, 사전 예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지어져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물론 그렇지만 전세임대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꼭 2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 어디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집이라는 게 어떤 집도 다 그렇지요. 사전에 물건 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

○**김현아 의원** 장관님이 강남과 관련돼서 한 여섯 차례 정도 대책을 발표하실 동안에 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하나로 나왔습니다. 물론 종합 지어서 나왔지만 강남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서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몇 년씩 기다리라고만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억울하고요. 일단 제가 취임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서민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레만 하더라도 오류동의 일반 공공건물을 증개축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로 제공하는 사업 현장에 제가 방문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예 기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주거 정책의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웬일인지 잘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그게 언론의 탓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들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아까 청년·신혼부부 150만 가구가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이 몇 호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약 60만 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나머지의 거의 90만 호 가구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정부의 이 정책에서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지요.

○**김현아 의원**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장관님이 강남 집값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프레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강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러면 국토부는 지금보다 홍보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제 주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정책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각 대학교에 홈페이지 연결해 둔 것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강남 집값에 서민 복지가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만큼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답한 속 풀려고 두더지 잡기처럼 강남 때려봤자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거 생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민을 서민답게 계속 서민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자 걱정 그만하시고 서민들 우롱하는 부동산 정치 중단하십시오. 강남만 쳐다보지 말고 일반 서민들의 삶에 눈을 돌리십시오. 청와대 눈치 보지 마시고 괜히 집값만 더 올리는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과 고령의 주택 보유자들도 보살피 주십시오.

임대주택 확보, 국가 재정으로만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주택과 부실·불량 건축물 정비하셔서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최근 잇따른 화재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집을 돈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삶의 공간으로 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김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니까,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삼성 봉건 왕조의 3대 세습 경제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로워야 할 법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재용은 나왔지만 정의가 대신 간헐했습니다. 오너는 돌아왔지만 오너 리스크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법칙 되새기면서 오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개의 특검 조사, 바로 BBK 특검·삼성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자금 120억 원의 의혹은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났습니다.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수사 결과가 하나씩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BBK 특검이 부실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특검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전환이나 차등과세 납부 없이 돈과 주식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또 이건희 차명계좌 대부분이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사후에 개설됐고, 심지어는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상당수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에 유상증자로 형성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 회장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에 유무상증자로 형성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은 조직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 그리고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협박범들에게 지급된 9억 원의 돈이 모두 차명계좌에서 인출됐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결국 부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초래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지적이 있는 뒤예요 지금 그 계좌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과세 문제가…… 예, 많이 보도된 걸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미 참여연대와 국세청이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참여연대 고발 건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2008년 수사 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 그렇습니까?

○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수사의 맥을 찾아가다 보면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되는 문제까지 다시 열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나 검찰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총리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고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가상통화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PPT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통화 광풍으로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엉거주춤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 다. 그러다가 가상통화 시장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능가할 정도로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고맙습니다.

○박용진 의원 정부에서 2016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때부터 한 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그 가상통화 TF가 그동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의원님,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되고 부작용이 속출한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작년 중반부터였습니다. 한 6월, 7월부터 그렇게 됐고, 저희가 TF를 운영한 것은 그 전해인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 4개월 운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작년 7월 이후에 과열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대책을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저희가 또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

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나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법안을 내면서 관련 TF 담당자들, 주로 금융위 직원들입니다. 이분들하고 면밀하게 논의를 해 보면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쯤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과열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범죄 자금으로 소요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때 대책을 미리 내놔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무책임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또 유독 할 일을 안 하고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요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박용진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상통화가 증권 또는 파생상품입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한 가지요, 앞서 총리께서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 거래소를 인가해서 제도화하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나하나 규율할 수 있다는 면,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거래 자체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미국은 인가제, 일본은 등록제지요.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어떤 잘못된 시그널과 영향이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미국이 인가제라고 하지만 뉴욕주에서만 인가를, 그것도 아주 엄격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안 해 주기 위한 인가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4월에 등록제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열 투기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우리나라는 등록제도 인가제도 안 했는데 왜 늘어난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단순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취급업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를 화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법정 화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가상화폐’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도 피하고 있고 법안에서도 ‘가상통화’로 이렇게 명명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혹시…… 지금 가상통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지요?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이 투기로 과열됐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마찬가지로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로 과열돼 있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게 아마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총리께서 분명한 원칙을 저는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방지하겠다, 투기 과열은 진정시키겠다, 블록체인은 육성을 하겠다 이런 큰 원칙을 지금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칙하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아까, 금융위 저희 기재부 포함해서 참여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정부 TF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개념 정립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과세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과세를 하려면 과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과세자료법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과세 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일단 1월 30일부터 금융위에서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초는 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과세 자료 확보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내 TF 내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실명제로 전환율이 지금 10%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세법 개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과세자료법 개정 혹은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법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지금 재정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별로의 대안 검토 그다음에 각국의 국제 사례를 저희가 죽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도 저희가 해외 출장까지 보냈는데요. 그와 같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지금 종합적으로는 국조실 TF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궤를 맞춰서, 그 논의 속에 끼워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 및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세목을 가지고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수익이 났다든지 또는 법인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의 세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 사례를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정책 방향에서 또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세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래소라 하지 않고 ‘취급업소’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취급업소의 폐쇄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논리 내지는 논란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폐쇄는 현재는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수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로 놓고는 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간접 규제만으로 하는 것은 투기 방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세를 통한 가상통화 투자 광풍을 잠재우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통화 거래소 그러면 뭔가 공신력이 있거나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거든요. 제 표현에 따르면 장마당 수준이거나 뺑뺑이 수준 이런 거래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에 의한 손실 그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라면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를 위해서라면 관련 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대책

및 투자자 보호대책을 갖춘 가상통화 거래소를, 그런 데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하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에 준해서 시세 조작행위의 금지, 설명의무,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또 판매방식에 있어서의 제한 이런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이 몹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몹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이렇게 투기 열풍이 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래소가 마구 생기면서 부추긴 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총리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하나 같이 한 것은 거래소가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취급업자다 그리고 뺑뺑이 수준이다, 이런 경우들은 최대한 시장 밖으로 퇴출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자 보호와 보안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장과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결의, 인가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줄 수 있어서 걱정이고 또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시장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가상통화를 두고 여전히 정부가 혼선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끌어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세 가지의 큰 원칙 아래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행위는 차단한다, 둘째는 투기와 과열은 진정시킨다, 셋째 불확실성을 낮추고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에 따라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분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고 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단편적인 보도를 보시면 약간 출렁거리는 것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이낙연 총리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견회 차명 계좌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이것은 금융행정혁신 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법리학자들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하다가 지금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월 17일이 부과제척기간의 시효 만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법제처에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유권해석을 당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조치도 빨리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가 그 어느 쪽도 눈치 보지 않고 법률적 관점에서만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했고요.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의미 있는 시기에 나와야 되겠지요. 이미 그 시한을 넘겨서 내놓는다는가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대정부질문에 함께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 의원(259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병석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무)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회 시 재석 의원(88인)

강병원	강훈식	곽상도	김경진
김민기	김병욱	김성식	김성원
김영우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한정
김한표	노웅래	노회찬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형수	손혜원	송옥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양승조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원유철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윤상직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이동섭	이수혁	이원욱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현승	이현재
임이자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정동영	정세균	정용기	정유섭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조승래
조훈현	주승용	지상욱	최경환(무)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68인)

강길부	김규환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중로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문진국	문희상
박경미	박병석	박성중	박완수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찬우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현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은혜	윤재옥
윤종필	윤후덕	이석현	이수혁
이철규	이학영	이현승	인재근
전재수	전혜숙	정갑윤	정세균
정유섭	제윤경	조승래	주호영
진선미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청가 의원(19인)

강효상	김부겸	김영주	김종회
김종훈	김진태	도종환	박범계
박선숙	박순자	박재호	손금주
오제세	이상민	이정미	이채익
이태규	이훈	최연혜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교홍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출석 정부위원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금융위원장	최중구

【보고사항】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경진	국민의당	탈당	2018. 2. 5.
김광수			
김종회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박준영	국민의당	탈당	2018. 2. 5.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안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서영교·신창현·추미애·윤관석·오제세·김정우·김민기·김영진·김혜영·정재호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서영교·신창현·추미애·윤관석·오제세·김정우·김민기·김영진·김혜영·정재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승희·주호영·박인숙·김명연·강석진·이태규·최도자·최교일·윤영석·김상훈 의원 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병욱·유은혜·박정·김혜영·오영훈·신창현·이찬열·박찬대·윤후덕·조승래·정성호·전재수·김종희·안민석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송옥주·황주홍·이철희·박찬대·김종대·이인영·이용득·박정·윤관석·한정애·서형수·신창현·심재권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송옥주·황주홍·이철희·박찬대·이인영·이용득·박정·한정애·서형수·신창현·심재권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성찬·박덕흠·홍문표·김석기·주광덕·박완수·김태흠·지상욱·윤종필·이종명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강길부·송희경·김종석·박맹우·백승주·최운열·홍의락·유민봉·김성식·김석기·윤종필·전희경·박찬우·이종구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송영길·김태년·안민석·고용진·이춘석·김정우·정태욱·윤관석·김종민·안호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기동민·이철희·신창현·심기준·김정우·김상희·김영호·이재정·인재근·신경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유은혜·송옥주·윤소하·정춘숙·전재수·오영훈·박찬대·박정·이철희·신창현·홍의락·인재근·노웅래·김정우·심기준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유은혜·송옥주·윤소하·정춘숙·전재수·오영훈·박찬대·박정·이철희·신창현·홍의락·인재근·노웅래·김정우·심기준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삼화·채이배·이동섭·김수민·권은희·송기석·김중로·이용호·김동철·최도자·박준영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영진·전혜숙·인재근·김민기·김영호·김정우·백혜련·서영교·윤관석·한정애·황희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영진·전혜숙·인재근·김민기·김영호·김정우·백혜련·서영교·윤관석·

한정애 · 황희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권은희 · 최도자 · 장정숙 · 김동철 · 오세정 · 김삼화 · 김수민 · 이찬열 · 채이배 · 박준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장석춘 · 황영철 · 김무성 · 정유섭 · 전희경 · 박성중 · 강석호 · 최교일 · 유재중 · 김성원 · 신보라 · 이철규 · 강석진 · 문진국 · 임이자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삼화 · 이동섭 · 채이배 · 김수민 · 권은희 · 김동철 · 황주홍 · 하태경 · 신용현 · 송기석 · 이용호 · 최도자 · 김중로 · 주승용 · 정병국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심재권 · 기동민 · 노웅래 · 김영호 · 권미혁 · 김철민 · 김경협 · 강창일 · 박찬대 · 원혜영 · 고용진 · 신창현 · 전재수 · 이수혁 · 문희상 · 최운열 · 심기준 · 유승희 · 박정 · 송옥주 · 박경미 · 이훈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부겸 · 박주민 · 최도자 · 조배숙 · 신창현 · 박찬대 · 박주민 · 민홍철 · 안규백 · 심기준 · 윤관석 · 김정우 · 김영호 · 김상희 · 정동영 · 소병훈 의원 발의)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심재철 · 민경욱 · 백승주 · 홍철호 · 강효상 · 정용기 · 강석진 · 이진복 · 박순자 · 이장우 · 김명연 · 안상수 · 김진태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심재권 · 노웅래 · 김영호 · 김경협 · 황희 · 박찬대 · 신창현 · 전재수 · 박정 · 송옥주 ·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2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

(2018. 2. 5. 선감학원아동 국가폭력피해 대책

위원회 회장 김영배 외 35인으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사법부 인사전횡에 관한 질문서

(2018. 2. 5. 주광덕 의원 제출)